

3/ 국제화시대의 황실외교

박순애



박순애 와세다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5년전쟁기 일본의 내각정보기구와 대내정보선전정책에 대한 연구로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최근에는 일본대중문화와 내셔널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호남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술로는 『コンテンツ化する東アジア』(青弓社, 2012), 『サブカルで読むナショナリズム』(青弓社, 2010), 『日本大衆文化と日韓関係』(三元社, 2002), 「조선총독부의 대중문화정책」(『한일민족문제연구』 제20호, 2011), 「전후 일본의 내각정보기구와 외곽단체」(『일본연구논총』 제32호, 2010) 등이 있다.

1. 머리말: 황실외교의 정치화

황실외교¹란 1970년대 쇼와(昭和) 천황이 유럽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혹은 국민 접대가 증가함에 따른 매스컴의 보도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다.²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를 검색해 보면 드물기는 해도 1970년대 이전에도 황실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³ 1971년에 쇼와 천황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매스컴에서 2~3회 사용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헤이세이(平成) 천황이 즉위한 1989년 이후에는 과거 황태자 시절의 외국 방문이 종종 거론되었고, 1993년에는 현 황태자 히로노미야(浩宮)의 결혼과 마사코비(雅子妃)가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황실외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사용빈도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황실외교라는 용어를 일본 정부나 궁내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궁내청에서는 황실외교 대신에 ‘외국교제’(外國交際)를 사용하고 있다.⁴ 황실의 공적 행위가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 황실, 천황, 황태자 등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천황제는 그 자체가 일본의 문화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異)문화를 논하는 데 결코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 문화의 특징만이 존재할 뿐이다. 박순애, 『일본입문·일본 문화와 사회』, 시사일본어사, 2006, 머리말. 또한, 천황 용어 사용 견해에 대해서는 박진우 편저,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논형, 2006, 7~8쪽 참조 바람.

2 渡辺治, 「皇室外交」, 吉田裕・原武史, 『天皇・皇室辭典』, 岩波書店, 2005, 288쪽.

3 『讀賣新聞』과 『朝日新聞』에서의 ‘황실외교’ 용어 사용 빈도(필자 작성)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미우리	3		3		2			1		1	
아사히		1	3	2			1	3		1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요미우리	6	9	20	3		2		2		2	1
아사히	2	9	23	6	2	2	2	2	1	2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요미우리			1				3	9		17	8
아사히							7	3	1	13	2
연도	1907	1932	1955	1960	1962	1971	1975	1976	1977	1978	1979
요미우리	1		1	1	1	3		1			
아사히		1				2	1				1

4 『궁내청요람』(宮内廳要覽)에는 ‘황실이 행하는 외국교제는 외국 원수와의 친서나 친전의 교환, 외국의 경조에 대해서 대리인 파견, 빈객으로 방문하는 외국의 황제, 황족, 대통령 등의 접우, 그 외 내방하는 외국 저명인이나 재일외교관 등의 인견 및 접대, 국제친선을 위해 천황이나 황족이 외국을 방문하는 것 등이다’라고 쓰여 있다. 高橋紘, 『象徵天皇』, 岩波新書, 1987, 110쪽에서 재인용.

‘외국교제’로서 행하는 공적 행위는 일본 정부의 의사와는 별도로 천황의 독자적인 의사에 의해 행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황실외교의 국빈 접우⁵나 외국 방문에는 황실의 독자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일본 정부의 외교와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것일까. 천황은 헌법에 의해 정치로부터 엄격하게 차단되어 정해진 국사 행위 외에는 행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황실외교라고 사용되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 정부의 의사나 의도가 관철되고 있다.⁶

패전 후 제정된 일본국 헌법 하에서 천황은 일체의 정치적 권한을 잃고 역대 각 정권은 천황·황실의 정치 관여를 주도면밀하게 배제해 왔다. 그러나 전전(戰前)의 외교 주체에서 ‘상징’으로 지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권위를 정치나 외교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궁내청이나 황실 측도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역할을 하려 했으며, 쇼와 천황도 어떤 형태로든 황실의 외교적 역할을 갈망했다고 전해진다.⁷

일본 정부가 천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외교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미국에 의한 점령기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은 맥아더와의 회담과 전국 순행(巡幸, 국내 행차)에서의 인기를 통치에 이용하려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천황을 단순히 ‘상징’으로서가 아닌 마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를 원했고, 특히 외교 관계에서 더욱 이 점을 중요시했다. 예를 들면 전권위임장, 신임장 등 외교 관계 공문서의 경우, 그 형식은 상징천황제 하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단순히 ‘인증’만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문장의 내용은 메이지헌법 하에서

5 일본어에서는 접우(接遇), 접대(接待), 회견(會見), 인견[引見=접견(接見)] 등에 대한 용어 사용이 구별된다. 예를 들면 ‘국빈 접우, 외교관 인견 및 접대’ 또는 회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宮内廳要覽』). ‘접우’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었으며(성종실록) ‘외국손님을 맞이해 예를 갖추어 대접함’의 뜻이다. 한국어사전에도 접우(接遇)는 ‘응접(應接)’과 같은 말이라고 실려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접우는 주로 조선 왕실에서 사용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일본어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국가의 빈객에는 ‘접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6 渡辺治, 『皇室外交』, 288쪽.

7 渡辺治, 『皇室外交』, 288쪽.

의 문체를 계승하고 있다. 즉 ‘만세일계’(萬世一系)와 같이 제국 의식이 뚜렷이 드러나는 문구는 피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마치 국가원수가 외교의 주체가 되는 것과 같은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천황을 이용한 외교가 메이지헌법에서 신성천황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에 교묘하게 의지하려고 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⁸

황실외교의 정치화는 우선 1960년 안보조약 개정 교섭을 전후한 시기에 쇼와 천황의 방미 계획이 부상했었다는 점, 1968년에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과 닉슨 대통령이 미일 경제 마찰을 타개하기 위해 쇼와 천황의 방미를 추진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제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아랍의 국가들로부터 안전하게 석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업계의 요망에 따라 황태자 아키히토(明仁)가 1981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도 했다.⁹ 명목상으로는 1971년 파이스알 국왕의 방일에 대한 답례라고 했지만, 10년의 공백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을 보면 황실외교를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92년에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헤이세이 천황의 중국 방문을 실현시키는 등, 황실외교는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일본 연구자들이 최근 들어 앞다투어 황실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후 상징천황제가 되면서 천황은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논리를 앞세워 정치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정치와 연관된 국정, 특히 외교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천황과 황실을 끌어들이서는 안 된다는 부정의 논리가 있다. 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 국제화를 내세워 일본의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에 의한 황실의 정치화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황실의 활동은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일까?¹⁰

8 渡辺治, 『皇室外交』, 289쪽.

9 高橋紘, 『象徴天皇』, 115쪽.

10 메이지헌법에서도 천황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황족이 현실정치에 관여하거나 내각을 직접 조각하는 경우는 없었다. 패전 직후 히가시구니노미야(東久邇宮)가 총리대신으로 임명된 것은 황족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각을 한 예다. 그 외에도 각 방면의 파견군과 일본 국외의

황실외교는 일본 정부, 궁내청, 황실이라는 삼자에 의한 대립과 협조가 착종하는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일본이 천황제를 계속 유지하는 한 황실을 내세운 외교전은 계속될 것이다. 황실외교는 황실의 독자성과 보수정치의 황실외교의 이용이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실외교의 독자성이란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상징천황제도하에서 황실외교가 잉태하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헤이세이 시대의 황실외교가 갖는 정치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황실외교의 시비(是非): 상징천황제론

1) 천황의 공적행위

일본 국내에서 ‘상징천황제’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천황을 이용해서 일본을 원활하게 점령통치하기 위해 남긴 것이 상징천황제였다. 비판하는 이들에 따르면 천황이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내정이나 외교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라면 큰 문제이며,¹¹ 천황의 ‘공적 행위’로서 행하는 황실외교에서는 상징이어야 할 천황이 사실상 원수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상징천황제 도입 이후 천황의 공무에 대한 정의가 오랜 기간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본 정부의 국회 답변에서도 확실히 상징천황의 지위와 공적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에서 봤을 때 천황은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 자국의 황제나 대통령과 대등한 사람으로 일본에서는 천황”¹²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예를 들면

군사시설에도 황족을 파견해 ‘천황의 종전 결의’(聖旨)를 전달한 것은 패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황족의 후예인 다케다 쓰네토시(竹田恒徳)의 자전에 의하면 히로시마 현 육군선박 사령부와 후쿠오카의 제6항공군 사령부 등에도 군의 경거망동을 막기 위해 같은 유형의 ‘성지’를 보내도록 쇼와 천황이 명령했다고 한다(高橋紘, 『象徴天皇』, 24쪽).

11 五十嵐仁, 『戦後政治の實像』, 小學館, 2003.

12 1960년 3월, 참의원예산위, 高橋紘, 『象徴天皇』, 111쪽 재인용.

방문국의 리셉션에서 상징천황제의 실태를 모르는 외국의 고관이 황족에게 경제 원조를 부탁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가통치의 대권은 전혀 없지만, 형식상 국가 우두머리(head)의 지위에 있는 자를 원수”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¹³ 헌법 제4조에서 천황은 ‘국사에 관한 행위’만 한다. 헌법 제6조와 7조에서는 그 ‘행위’의 세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각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관의 임명, 국회 소집, 중의원의 해산, 영전의 수여와 의식 등과 같이 형식적·의례적 행위가 ‘국사 행위’(國事行爲)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천황의 해외 방문은 ‘국사 행위’ 속에 들어 있지 않고 ‘공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¹⁴

그러면 ‘공적 행위’란 무엇인가. <표 1>의 천황의 활동을 보면 ‘국사 행위’와 ‘공적 행위’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천황의 자유의사에 입각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공무에 속하는 정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정부예산인 공금으로 처리된다. 궁내청의 의견은 “상징으로서의 공적 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확실하게 열거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다”¹⁵는 것이다. 아무튼 공적 행위가 확장되어 정치, 외교 등에 상징천황이 깊이 개입하는 ‘원수화’(元首化)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궁중 만찬에서의 천황의 만찬사 등에서도 침략전쟁과 관련된 정치적 행위자로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천황의 존재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의 상대국가라는 특수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일본의 최고 원수는 수상이 아니라 천황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는 상징천황제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경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13 1973년 6월, 중의원예산위, 高橋紘, 『象徵天皇』, 111쪽 재인용.

14 1973년 4월, 중의원내각위, 高橋紘, 『象徵天皇』, 111쪽 재인용.

15 1974년 2월, 중의원내각위, 高橋紘, 『象徵天皇』, 111쪽 재인용.

〈표 1〉 일본 천황의 활동¹⁸

	국사 행위	공적 행위	그 외의 행위	
성격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천황이 행하는 <u>헌법에 정해진 행위</u>	자연인으로서의 천황의 의사로 천황의 지위에 근거해 행하는 여러 활동. 천황의 지위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u>내각이 책임을 진다.</u>	공적 성격, 공적인 색채가 있는 행위	순수한 사적 행위
내용 예시	• 내각 총리대신의 임명(6조) • 최고재판소장관의 임명(6조) • 국회 소집 · 중의원 해산 • 총선거 시행 공시 • 국무대신 그 외의 관리 임명과 전권위임장, 대사, 공사의 신임장 승인 • 대사면, 특사, 감형, 형의 집행 면제와 복권의 인증 • 영전(훈장 등) 수여 • 비준서와 외교문서 인증 • 외국 대사와 공사의 접수(신임장 봉정식) • 의식을 행하는 것	• 국회 개회식에서 연설, 인증관 임명식 • 전국체육대회, 전국식수제, 전국'풍요로운 바다 만들기' 대회, 전국 전물자 추도식 등 전국 규모의 행사에 출석, 원유회 • 외국 요인과의 회견, 국빈환영 행사나 국정만찬회, 외국 공식 방문 • 신년과 천황 생일의 일반 참가 • 피해지의 위문 방문	• 복지시설 위문, 예술감상(문화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미술전시찰 등) • 다이조사이(大嘗祭) 등 공적성격이 있는 황실전통행사	• 예술감상(콘서트 등), 테니스, 사적 교제 • 니나메사이(新嘗祭) 등 궁중제사
비용	궁정비(宮廷費)¹⁶ 의식, 국민, 공빈 등의 접우(接遇), 행차(行幸), 외국 방문 등 황실의 공적 활동에 필요한 경비, 황실 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 황거 등 시설에 필요한 경비(2012년 기준 55억 7,996만 엔). 궁내청이 경리하는 공금(황실경제법 제5조)			내정비(內廷費)¹⁷

2) 헌법조사회 보고서에서 보는 천황의 공적 행위에 대한 제 해석

일본국 헌법에 의하면 상징천황은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헌법 제4조)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황실외교는 정치적 색채를 띠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황, 황족의 외국 방문은 상대국의 강한 요청이나 또는 외교 교섭 과정에서 정치적

16 황실을 유지하는 비용은 황실비(內廷費, 宮廷費, 皇族費)와 궁내청비로 이루어져 있다. 황족비는 황족의 품위유지비(2012년 기준 총액 2억 9,128만 엔). 궁내청비는 궁내청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사무비(2012년 기준 105억 4,344만 엔).

17 내정비(內廷費)는 천황과 내정에 있는 황족의 일상비용(2012년도 기준 3억 2,400만 엔). 궁내청 공금 아님.

18 『讀賣新聞』 2009년 12월 19일자 및 궁내청 홈페이지, 일본국 헌법 등 참고해 작성.

인 색채를 띠고 결정되는 예가 많았다. 그 때문에 ‘황실외교의 정치적 이용’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황실외교가 가지는 문제는 천황의 외교 행위가 헌법 제4조에서 지정한 ‘국사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나 궁내청은 천황의 외교 행위를 사실상 ‘실질 원수론’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내각법제국에서는 지금까지의 황실외교가 ‘상징천황의 지위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쇼와 천황이나 황태자 아키히토의 미국 방문은 이러한 견해와는 괴리가 있으며 명백하게 정치적 의미 내지는 영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국이 상징천황을 일본국가의 원수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헤이세이 천황은 황위 계승 시 “일본국 헌법을 지킨다”고 명언했는데, 다카하시 히로시(高橋紘)의 말을 빌리자면 자칫 외무성 페이스로 밀어붙일 황실외교를 천황 스스로의 발언으로 견제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실외교의 독립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오히려 통상적인 ‘국사 행위’의 운용이 헌법이 정한 범위로부터 현저하게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을 전제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천황의 헌법적 해석이나 종래의 상징천황제에 대한 시비 문제 등에 관한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조사위원회 활동을 전개했다.²⁰ <표 2>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조사회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상징천황제에 관해 개진한 내용인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상징천황제 하에서 황실의 행위 가운데 특히 황실외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보고서²¹와 참의원 헌법조사회

19 高橋紘, 『象徵天皇』, 204~207쪽.

20 헌법조사회는 중의원 헌법조사회(147회 국회 2000년), 중의원 일본국 헌법에 관한 조사특별연구회(163회 국회 2005년), 중의원 헌법심사회(167회 국회 2007년)에서의 일본국 헌법 및 일본국 헌법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기본법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행해 헌법개정원안, 일본국 헌법에 관한 개정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심사회는 제167회 국회소집일(2007년 8월 7일)부터 국회법 제102조 6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의원에)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21 衆憲資 第61号 「衆議院憲法調査會における「天皇」に関するこれまでの議論」, 平成 17年 2月, 衆議院

의 보고서²² 내용은 사실상 황실 문제에 관한 일본의 연구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천황제를 향한 헌법 개정에 대한 각각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장 1절 ‘천황의 공적 행위’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천황이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접견을 행하고 있는 이상 천황은 원수(元首)라는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징이라는 입장 위에서 외국에 대한 대표로서 또는 국내에 대한 ‘국가의 수령’(Head of State)으로서 활동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원수’의 정의를 애매하게 남겨둔 채 황실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대사 접견 등을 ‘국사 행위’의 가장 앞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천황제 강화를 의도하고, 천황제를 국민주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요미우리시안(讀賣試案)²³은 현실의 황실외교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며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국민과 공민의 접우와 관련한 모든 의식을 국사 행위로 위치짓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행위가 상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천황의 외국 방문을 포함한 황실외교 자체가 정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자 정치적 행위로서 황실외교의 자립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징천황제라고 했을 때에 정치와는 관계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국민을 통합하는 사회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고도로 정치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천황이 독주하는 위험성보다는 내각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험성 쪽이 높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憲法調査會事務局.

22 2005년 參議院憲法調査會, 「日本國憲法に關する調査報告書」.

23 1994년 공표한 시안의 제3차 개정판으로 2004년 5월 3일 요미우리 신문지상에 공표. 讀賣新聞社, 『憲法改正—讀賣試案 2004年』, 中公新書, 2005 참조.

〈표 2〉 중 · 참의원 헌법조사회 보고서

	중의원 헌법조사회	참의원 헌법조사회
상징천황제	• 국민과 함께 국민의 행복을 바라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상징천황으로서 모습이며 이것이 상징천황의 제1요건이 아닌가(高橋紘) • 천황 지위의 근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이다. 따라서 권능을 부여하는 것도 천황제를 폐지하는 것도 국민의 총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은 현재의 천황제에 만족하고 있어 현재의 상징천황제는 가장 안정된 천황제이다(横田耕一)	• 우리들이 목표한 것은 입헌군주제이며, 천황은 통치권을 갖지 않고 국가 및 주권자인 국민의 통합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Richard A. Poole). • 최소한 현재 또는 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상징천황제는 국민에게 정착, 효과를 발휘(成田憲彦). • 상징천황제는 국민에게 넓게 지지받아 왔다(江橋崇). • 천황으로부터 대권을 없앤 것에 의해 국민의 천황에 대한 감정이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순화된 것은 좋았던 것 아닌가(平松毅). • 제1조의 '상징'에서 여러 운용 실태를 인출하는 것에는 근거가 없다. 천황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은 북동아시아의 국가가 위화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헌법의 원칙인 국제협조주의의 관점에서 천황제와 화합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笹川紀勝).
천황의 지위	• 현재 <u>외국의 대사 등의 접견을 천황이 행하고 있는 것 등을 들어 원수라고 인식해도 좋지 않은가. 그러나 천황을 원수라고 명기할 필요는 없다('원수'의 정의가 애매한 채).</u> • 천황은, 상징이라는 입장 속에서 <u>외국에 대한 대표로서 또는 국내에 대한 'Head of State' 국가의 수령'으로서 활동한다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며, 상징을 그만두고 원수로 하는 것에는 저항을 느낀다. 다만 원수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園部逸夫).</u>	• ('공법연구회 헌법 개정 의견'과 '요미우리 시안') <u>외국의 대사 접견 등을 국사 행위의 필두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천황제 강화를 이미 의도하는 것으로 천황제를 국민주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향을 시사한다(笹川紀勝).</u>
국사 행위 외	• 천황은 국사 행위뿐만 아니라 공적 행위에 의해 그 상징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園部逸夫). • 현재는 천황이 독주하는 위험성보다는 내각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험성 쪽이 높다(横田耕一). • 천황의 행위 중 황실외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천황의 외국 방문 자체는 정부의 판단이고 그 자체에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수행원의 선정 등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정치색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高橋紘).	• 국사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의례나 형식은 사회질서의 유지나 구축, 속하는 국가, 사회 역사 확인에 큰 의지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의례나 형식적 행위에 대해서도 그 운용에는 충분한 배려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園部逸夫). • 국사 행위의 의식 이외에 예를 들면 국민관계의 제의식이나 국가적인 의미를 갖는 행차(行幸)를 국사 행위로 위치매김하는 것은 가능한가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園部逸夫).

〈표 2〉 중·참의원 헌법조사회 보고서 (계속)

	중의원 헌법조사회	참의원 헌법조사회
천황제 평가	• 천황은 정치와는 관계 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국민을 통합한다고 하는 사회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도로 정치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横田耕一). • 일본 역사에서 천황은 무권력의 문화 지킴이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징천황제란 일본의 역사가 만들어 온 긴 전통이 있는 것이다(松本健一).	• 현행 헌법 하에서도 황실 일은 황실 스스로 이를 결정할 자립성, 자율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坂本是丸). • 황실이 본래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전전 황족은 모두 군인이었고 군인으로서 활동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규정도 없고 그대로 놓아두면 궁내청으로서도 수습이 안 될 것이다(園部逸夫).

3) 최근 일본국 헌법 개정 시안과 제안에 관한 내용

〈표 3〉은 최근 일본국 헌법 개정 시안과 제안에 관한 내용으로 3개 정당, 3인의 정치인, 그리고 9개의 민간단체 등 총 15종의 헌법 개정 시안을 정리한 자료다.²⁴ 과반수가 상징천황제 유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천황원수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상징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천황을 원수로 규정하자는 것은 분명 모순된 도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등 정당과 정치인의 주장에서 이와 같은 도식이 확인된다. 그 외에 나카소네 전 수상이 회장을 맡고 있는 민간단체 세계평화연구소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상징천황제를 유지하면서 천황을 원수로 명기하고 정치의 최고지휘권은 수상이 갖는다는 내용으로, 과연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고 과거사 정리도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만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이 성립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24 『調査と情報』第474号, 國立國會図書館, 2005. 3. 18. 政治議會課憲法室・諸橋國彦, 「主な日本國憲法改正提案及び提言」에서 발췌.

〈표 3〉 일본국 헌법 개정 시안 및 제언

		천황제 유지 여부	천황제 개정/검토	안전보장/국제공헌
정 당	자민당 「自由民主党 憲法調査會憲 法改正プロジ ェクトチーム: 論点整理」	상징천황 제 유지	• 현행 헌법 제7조 제4호 개정 • '제사' 등 천황의 공적 행위 • 천황을 원수로 규정 • 여성 천황 용인	• 자위를 위한 전력 보유 • 평화주의 원칙 견지 •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 수상 전력 최고지위권 • 비상사태 규정 • 국제 협력(공헌) 규정 • 집단적/지역적 안전보장 규정
	민주당 「民主党憲法 調査會: 創憲 に向けて、憲法 提言中間報告」			• 현행헌법'평화주의'유지 • UN 집단안보 활동 참여 • UN 헌장상의 제약된 자위권 • '무력행사' 최대한 억제
	공명당 「公明党憲法 調査會: 論点 整理」	상징천황 제 유지	• 천황을 원수로 규정 • 여성 천황 용인	• 집단적 자위권(반대의견도) • 개별적 자위권 행사 명확화 • 집단 안전보장 참가 • 국제공헌 명확화 • 긴급사태 규정 • 국제기관에의 주권 이양
정 치 인 개 인	愛知和男, 「平成憲法・愛 知私案」		• 원호규정 • 천황이 국회의장을 임명 • 천황의 준국사, 행위 규정 • 국민의 통치권 명기 • 천황을 원수로 규정 • 천황의 상징규정 내용을 개정	• 국방군 보유 • 세계평화/지구 안전보장 이념 • 국제기관 활동 적극적 참획 • 자위권 명기 • 동맹의 권리 • 국방군 정치 불개입 • 수상의 국방군 최고지휘권 • 국방군 출동의 국회 승인 • 국가 긴급사태 규정
정 치 인 개 인	鳩山由紀夫, 「憲法改正試 案」	상징천황 제 유지	• 주권은 국민에 있다 • 여성 천황 용인 • 천황의 외국 방문 등을 국사 행위로 규정 • 천황을 원수로 규정 • 국사 행위 조연 주체를 내각에서 수상으로 변경	• 침략전쟁 부정 • 집단적 안전보장 활동 참가 • 국제기관에의 주권 이양 • 주권의 제약 • 국제법 준수 • 수상의 자위권 최고지휘권 • 자위군 출동 국회승인 • 대량파괴병기 불보유 • 징병제 금지 • 긴급사태 규정

〈표 3〉 일본국 헌법 개정 시안 및 제언 (계속)

		천황제 유지 여부	천황제 개정/검토	안전보장/국제공헌
정치인 개인	山崎拓, 「新憲法試案」	상징천황 제 유지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사 행위 조연 주체를 내각에서 수상으로 변경	• 침략전쟁 부정 유지 • 자위권 명기 • 문민통제 • 수상 육해공군 지휘권 • 비상사태 규정 • 국제평화 실현/협력 육해공군 보유 • 헌법 9조 2항 삭제
민간단체	新しい日本をつくる國民會議			• 집단적 자위권 규정 • 긴급사태 규정
	經濟同友會憲法問題調査會 「憲法問題調査會意見書」	상징천황 제 유지		•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 해석 개정(현행 헌법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世界平和研究所「憲法改正思案」	상징천황 제 유지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천황을 원수로 규정 • 국사 행위 조연 주체를 내각에서 수상으로 변경	• 침략전쟁 부정 • 국방군보유 • 방위군은 UN이나 국제협조의 틀에서 활동 참가 • 수상의 방위군 지휘권 • 방위군 무력행사에 대한 국회승인 • 긴급사태 규정
	「21世紀の日本と憲法」有識者懇談會			• 세계평화회의의 공헌에 대한 규정 • 군대 보유 • 헌법 9조 2항 삭제
	日本會議「新憲法の大綱」		• 입법군주국 규정 • 천황의 제사의례에 관한 규정 • 원수 및 상징의 존엄엄수 의무 • 천황을 원수로 규정 • 상징 규정 내용 개정	• 수상의 국군최고지휘권 • 비상사태 규정 • 자위와 국제평화를 위한 국군 보유
	日本經濟団体連合會「我が國の基本問題を考える」			• 헌법 제9조 1항 유지 • 집단적 자위권 행사 • 자위권이 국제활동에의 공헌/협력 명확하게 • 자위대 보유 명확하게

〈표 3〉 일본국 헌법 개정 시안 및 제언 (계속)

		천황제 유지 여부	천황제 개정/검토	안전보장/국제공헌
민 간 단 체	日本・東京商 工會議所「憲 法改正につい ての意見」	상징천황 제 유지		• 자위권 보유 • 국제협력 활동에 자위대 파견 인정 • 전력보유 • 집단적 자위권
	總合研究所 「21世紀日本 國憲法思案」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천황이 양원의장 임명 • 국민의 접우, 문화예술을 국사 행위로 규정 • 천황을 원수로 규정 • 국사행위 조연 주체를 내각에서 수상으로 변경	• 침략전쟁 부정 • 수상의 국군최고지휘권 • 국군의 병력/편성/예산의 국회승인 • 비상사태 규정 • 국군 출동/파견 국회승인 • 독립/주권을 지키고 국제 사회 평화 기여 위한 국 군 보유
	讀賣新聞社 「憲法改正 2004年試案」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정관련으로 보일 수 있 는 여지가 있는 국사 행위 를 보다 현실화 • 천황의 일본국 대표 규정 (대외적 국사 행위만) • 황실전범의 법률화	• 침략전쟁 부정 • 무차별 대량파괴병기 불보유/불사용 • 긴급사태 규정 • 수상의 국군최고지휘권 • 징병제 금지 • 국제협력 이념 명기 • 국제활동 적극 참가 • 군대 국외 파견 국회 승인

3. 쇼와 시대의 황실외교의 실태

황실외교의 정치화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교섭 진행 중에 시작된다. 조약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운동이 심해지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은 안보개정을 무리 없이 실행하고 미일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미일수교 100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태자를 방미시킨 후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해 안보조약 비준서 교환식에 출석시키려 했다. 이러한 황태자 방미계획은 1959년 황태자의 결혼

으로 ‘밋치 붐’²⁵이 이는 등 국민을 열광케 했던 데서 착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궁내청 장관 우사미 다케시(宇佐美毅)는 정치가 황실을 이용하려 한다면 반대했고,²⁶ 방미는 9월로 연기되었다.

1960년 6월 19일 신안보조약 성립 후 기시 내각은 총사퇴했고, 9월 22일부터 황태자 부부는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은 안보투쟁 후의 반미 기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밋치 붐’에 편승해 방문국 순위까지 바꾸면서 방미를 서두를 정도로 황실외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당시 미치코 황태자비는 장남 히로노미야(浩宮)를 출산한 후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미 길에 올랐고, 미국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아가며 방미 외교를 무리해서 수행한 탓에 미국에서 귀국할 때에는 체중이 11킬로그램이나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²⁷ 한편 안보투쟁의 거센 반대로 인해 일본 방문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는 국화장(大勳位菊花章) 훈장을 보냈다. 사실 쇼와 천황도 아이젠하워의 방일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점령 중 미국의 ‘호의’에 의해 천황제가 존속될 수 있었던 점, 전쟁 책임에 관한 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 한다.²⁸

황실 역사 속에서 천황이 외국을 방문한 첫 사례는 1971년 9월의 유럽 7개국 순방이다. 그때까지 천황은 황실의 가장으로서 황족이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천황 본인이 나가는 규정은 없었다. 1964년에는 ‘국사 행위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천황의 외유가 가능해졌지만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이 이에 응하지 않았

25 일본 국민들은 현대판 신데렐라 쇼다 미치코(正田美智子) 황태자비에 친근감을 느껴 ‘밋치 붐’이 일어났다. 1959년 4월 혼인식 날 50만 명이 넘게 퍼레이드를 보러 나왔으며 TV 중계로 15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TV는 종래 130만대에서 혼인식 2주 전 200만대, 혼인식 후 240만대 보급: NHK 추산). 도시부의 TV 보급률 1957년 8%에서 1959년에는 35%로 고도경제성장기 내구소비재 구입 붐(三種の神器)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흑백TV 14인치는 7만 3,500엔으로 셀러리맨 월급 314배였다. 「皇太子さまご婚約 雅子さんブームに産業界熱い期待」, 『讀賣新聞』, 1993년 1월 10일자 조간.

26 高橋紘, 『象徴天皇』, 112쪽; 渡辺治, 「皇室外交」, 289쪽.

27 高橋紘, 『象徴天皇』, 113쪽.

28 渡辺治, 「皇室外交」, 289쪽.

다.²⁹ 그러다가 1970년 4월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방일한 벨기에의 초청 형식으로 천황의 7개국 외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다. 벨기에, 독일, 영국 3개국의 공식 방문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4개국의 비공식 방문이었다. 각의에서 결정되기 직전까지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순수한 국민의 상징, 통합의 상징이신 천황께서 외국 여행을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保利茂 관방장관의 국회 답변)라고 했지만, 방문국 현지에서 천황의 유럽여행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우호친선을 위한 방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³⁰

쇼와 천황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버킹검궁전에서 열린 만찬회의연설에서 엘리자베스여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영일관계에 대해 “우리들은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짓을 말할 순 없습니다. 우리 양국 국민간의 관계가 항상 평화롭고 우호적이었다고는 거짓을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쇼와 천황의 답사는 황후와 함께 방문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했으며 “영국 국민의 풍부한 온정은 50년 전의 황태자 시절 방문했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 여행에 대한 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발언을 했다.³¹ 아무리 천황의 존재가 전후에 ‘상징’으로 변했다고는 해도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도 당연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심은 기념식수가 뽑히고,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에 보온병이 투척되어 앞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입헌군주국에서 환대해 줄 것으로 예측³²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침략전쟁과 일본군의 포로 학

29 「池田首相は「そんなことはもったいなくて出来ない」と応じなかった」, 『朝日新聞』「外遊の原点」, 1992년 10월 7일 朝刊.

30 『朝日新聞』「外遊の原点」, 1992년 10월 7일 朝刊.

31 『朝日新聞』「お言葉の苦心」, 1992년 10월 8일 朝刊. 당시 천황의 답사는 외무성 관계자가 영문으로 쓴 것을 궁내청에서 일본어로 옮긴 것이라는 후문이 있다.

32 渡辺治, 「皇室外交」, 290쪽.

대 문제로 퇴역군인,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맹우’라는 현수막을 걸고 ‘전쟁 책임’을 질타했다.³³ 결국 쇼와 천황의 유럽 여행은 실패였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우호친선을 위한 방문이라면 그에 상응한 행위가 수반되었어야 할 것이다.

1968년 미일 경제 마찰이 심해지자 일본 정부는 그 타개책으로 천황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쇼와 천황도 태평양전쟁은 자신의 의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변명’의 기회를 얻고자 방미를 원했지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일본공산당과 사회당의 반대에 부딪쳐 성사되지 않았다.³⁴ 이후 1973년 방미를 예정하고 추진했던 일정도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인한 닉슨 대통령의 퇴진과 금권정치로 인한 다나카 내각의 사퇴 등으로 인해 이루지 못하다가, 1974년 11월 포드 대통령의 방일 때에 다시 방미 초청을 받아 1975년에 성사되기에 이른다.

이번에는 1971년 유럽 방문의 교훈을 통해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유의를 했다. 황실 홍보를 위해 출발 전 6회에 걸쳐 외국인 기자와 만났고 수행원으로 보도담당 대사를 두기도 했다. 연설 준비를 위해서는 몇 번이고 회의를 열었다. 워싱턴의 일본대사관에서 만든 원안을 외무성과 총리 관저에서 수차례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궁내청이 천황의 어조에 맞춰 형용사 등을 손질했으며, 번역을 놓고도 상당히 고민할 정도였다. 천황의 연설에서 주목을 모은 부분은 “나는 다년에 걸쳐 귀국 방문을 염원해 왔습니다만 혹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꼭 귀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깊은 슬픔을 갖고 있는 저 불행한 전쟁 직후, 귀국이 우리 일본의 재건을 위해 따뜻한 호의와 원조의 손을 뻗어준 것에 대해 귀국민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³⁵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에서 열린 포드 대통령 주최 만찬회에서의 천황의 스피치는 호평을 받았다. 키신저 국

33 『朝日新聞』, 「外遊の原点」, 1992년 10월 7일 朝刊.

34 궁내청 특히 우사미 장관은 단호히 반대했다(渡辺治, 「皇室外交」, 291쪽).

35 1975년 방미에서 나온 이 발언은 태평양전쟁에 대해 사실상의 사죄로 받아들여졌다. 「私が深く悲しみと(I deeply deplore)する, あの不幸な戦争」(渡辺治, 「皇室外交」, 290쪽).

무장관은 너무도 감동을 받았다고 절찬했으며 ‘이것으로 전후 미일관계는 끝났다’고까지 말하는 뉴스 해설자도 있었다.³⁶ 설령 상징천황제 하의 천황이라 하더라도 일본을 대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조항과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국의 인식이었다. 사실상 천황을 원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방미 황실외교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황실을 외교에 이용하는 보수정치의 의도는 계속된다.

4. 헤이세이 황실외교: 국제화시대의 황실외교

1) 외국빈객으로 보는 글로벌리제이션

외국빈객의 일본 방문이라는 측면에서 황실외교를 보면 1990년대와 21세기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89년에서 2000년 사이에 국빈으로 접우한 국가원수는 34회 30개 국가다. 12년 동안 매년 3회 정도 천황의 공적 행위로서 외국의 국민들을 접우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34회 중 아시아 국가가 8회 6개국이었다. 한국이 1990년 노태우 대통령, 1994년 김영삼 대통령,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총 3회로서 가장 많다. 그러나 1998년 중국과 1993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1990)와 요르단(1999) 등, 전체 34회에서 보면 아시아 국가는 전체의 약 20%에 불과했다. 1990년대 국빈 형태의 황실외교가 아시아보다는 구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그런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빈 접우는 19회로 17개국이다. 1990년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55%로 줄어든 셈인데 확실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불경기로 인한 경비 절감 때문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중 12회, 즉 전체의 60% 이상이 아시아 국가의 원수들을 접우했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필리핀(2002), 인도네시아 2회

36 『朝日新聞』, 1975年 10月 17日.

〈표 4〉 헤이세이대의 빈객 접수 현황(1989~2012)

연도 (헤이 세이)	1989 (1)	1990 (2)	1991 (3)	1992 (4)	1993 (5)	1994 (6)	1995 (7)	1996 (8)	1997 (9)	1998 (10)	1999 (11)	2000 (12)
회수	2	2	2	3	4	2	3	5	3	4	3	1
국민	짐바 브웨	아랍에 미리트	소비 에트 고르바 초프	미국 부시	필리핀	한국 김영삼	아일 랜드	브라질	멕시코	이탈 리아	룩셈부 르크	헝가리
	탄자 니아	한국 노태우	네덜란 드여왕	페루 후지 모리	말레 시아	폴란드	이집트	미국 클링턴	독일	한국 김대중	오스트 리아	
				체코슬 로바키 아	러시아		남아프 리카	튀니지	불가리 아	중국	요르단	
					포르 투갈			벨기에		아르헨 티나		
								프랑스				
공빈		1		2	4	3	2	2	2	3	3	2
공무		4	8	6	4	7	5	3	9	5	9	3
빈객	82	103	21	24	42	23	27	28	46	48	25	25

연도 (헤이 세이)	2001 (13)	2002 (14)	2003 (15)	2004 (16)	2005 (17)	2006 (18)	2007 (19)	2008 (20)	2009 (21)	2010 (22)	2011 (23)	2012 (24)
회수	2	1	3	1	2	1	2	2	1	1	1	2
국민	노르 웨이	필리핀	한국 노무현	덴마크	말레이 시아	인도네 시아	스웨덴	중국	싱가 포르	캄보 디아	부탄	말레이 시아
	남아프 리카		인도네 시아		모로코		베트남	스페인				쿠웨 이트
			멕시코									
공빈	2	2				1	2	4	2	1		
공무	9	7	4	5	8	5	11	10	8	10	8	5
빈객	29	21	52	23	53	38	35	58	35	28	18	35

* 빈객³⁷ = 국민+공빈+공식 실무 방문 빈객+실무 방문 빈객

37 국민의 자격은 동일 인물일 경우 1회만 적용되고, 2회 때에는 국민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필리핀 마르코스 경우는 1966년과 1977년 두 번 모두 국민 접수를 받았다.

〈표 5〉 빈객 접우 기준³⁸

	대상	숙박	환영(송) 식전	천황과의 회견	궁중 만찬회
의례적 요소가 강한 경우					
국민	국왕·대통령· 국가주석	영빈관/ 타숙박시설	의장대/ 국가연주	천황과 황후	만찬회
공빈	대통령·황태자· 왕족·수상·부대 통령	영빈관/ 타숙박 시설	있음	배우자 있는 경우 황후 동석	오찬회
실무적 요소가 강한 경우					
공식 실무 방문 빈객	국민·공빈 대상 자로 실무적 용건 으로 방일	호텔 등	없음	배우자 있는 경우 황후 동석	오찬(일정에 의함)
실무 방문 빈객	원수·수상·왕족	호텔 등	없음	안건에 의함	원칙적으로 없음
외무성 빈객	관료, 주요 국가 기관장 등	호텔	없음	원칙적으로 없음	원칙적으로 없음

* 국민, 공빈 모두 3박 4일 일정으로 체재 기간의 숙박, 국내 여행은 정부가 부담(국가 예산).

* 국민은 주일대사 부처를 포함해 14인까지, 공빈은 12인 이내.

* 접우 동반은 국민은 국내정+내각+외무성에서 8인, 공빈은 외무성 의전장부처 이하 5명.

(2003, 2006), 말레시아 2회(2005, 2012), 베트남, 중국(2008), 싱가포르(2009), 캄보디아(2010), 부탄(2011), 쿠웨이트(2012)였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어가자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아시아로 눈을 돌려 진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황실의 빈객 접우의 형태는 국민, 공빈, 공식 실무 방문 빈객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2008)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2009)의 경우 국민 방문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공빈 자격으로 방문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 실무 방문 빈객 자격이었다. 국민 방문이 아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표 5〉의 빈객 접우 기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빈 자격으로

38 1961년 8월에 일본 정부는 ‘공식제도연락조사회’를 설치했으며 그 때에 접우 기준이 개정되었다. 위의 사항은 1984년 3월 「國公賓接遇について」의 기준개정에 의함.

천황과의 회견이나 황실과의 오찬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13일 첫 방문지 일본을 방문했는데 11월 12일 헤이세이 천황 즉위 20년 기념식과 겹쳐 천황 부부와 오바마 대통령 3인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오찬회를 가졌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세이 천황에게 90도 각도로 인사해 미국은 물론 한국에까지도 논란을 안겼다.

일본은 황실외교에 있어 접우 기준은 어떤 나라든 평등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력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외교관계다. 국민이 방문하면 천황은 영빈관에서 환영식, 황거에서의 회견, 궁중 만찬, 송별인사 등 4회에 걸쳐 접우한다. 영빈관에서 환영식을 끝낸 후 천황은 상대방 원수와 같은 차를 타고 황거로 돌아와 궁전(竹の間)에서 훈장과 선물, 초상화 교환, 기념촬영을 하고 30분 정도 회견을 한다. 이때에 의례적인 환영인사를 한 후 마지막에 ‘과거의 불행한 일’에 대한 사죄를 간단하게 해왔던 것이다. 회견은 밀실에서 행해지며 천황과 원수, 일본 측의 통역 외에 시종관(侍從長), 식부관장(式部官長)만이 배석한다. 회견이 끝나면 궁내기자회에서 식부관장이 회견의 분위기만 전달한다. 내용은 공표되지 않으며 기록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⁹ 예를 들면 1986년 11월 필리핀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방일 때 사죄의 유무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일본의 관례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된 사례였다. 일본은 1958년, 1964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이미 사죄를 했기 때문에 이날의 필리핀에 대한 천황의 사죄 발언은 국제의례상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천황의 사죄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만찬회 석상에서 행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만찬사를 포함해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과제다.

39 高橋紘, 『象徴天皇』, 98~99쪽.

2)외국 방문으로 보는 글로벌리제이션

외국방문으로 보면 쇼와 시대에서 헤이세이 시대로의 변화는 황실외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후 쇼와 천황의 해외 방문은 1971년 유럽 순방과 1975년 방미 두 번에 불과했다. 쇼와 천황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현지의 신문은 ‘노멘(能面)과 같다’고 썼는데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⁴⁰ 그만큼 유럽에서 쇼와 천황의 방문을 평가절하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헤이세이 천황은 황태자 시절 1960년 9월 22일 미일수교 100주년 기념 방미를 시작으로 1989년 천황 즉위 직전까지 22회 37개국을 방문했으며(동남아시아 6회, 중동 국가 2회), 천황 자격으로는 2012년까지 15회 32개국을 순방했다. 외유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일본의 경제 및 군사 대국화에 따른 황실외교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열린 황실’을 대변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위 후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3개국이다. 모두 황태자 시절에 이미 방문했던 곳이었다. 다음으로 1992년 중국 방문이었다. 헤이세이 천황의 황실외교에서 아시아 국가 방문의 횟수가 늘어났고, 헤이세이 시대로의 변화가 일본 국민에게는 일본국가 변화의 이미지로 정착되어 가는 감이 없지 않다.⁴¹ 그 실상을 보도록 하자.

〈표 6〉의 헤이세이 황실 외국 방문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중에 아시아 방문은 아키히토 천황이 황태자 시절에 쇼와 천황을 대신한 방문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6회, 중동 국가 2회였지만, 헤이세이 시대에 아시아 방문은 중국 1회와 동남아시아 2회에 불과하다. 종래의 구미 방문에서 1992년 10월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로의 방문이 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사실이 전혀 다르다. 그간 황태자 히로노미야(浩宮)의 방문은 29회 중 8회가 아시아 국가들이다. 이중 사우디아라비아가 3회,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1회 등 중동이 4회로 50%가 자원 외교의 성격이었다. 특히, 황실의

40 「『平成』の親善(訪歐から訪中へ「皇室外交」取材メモ, 4」, 『朝日新聞』, 1992年 10月 9日 朝刊.

41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는 아시아로의 외유 증가를 헤이세이 시대의 변화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渡辺治, 『皇室外交』, 291쪽).

해외 방문은 일본의 정치적 영향을 증대시키고 각국 국민에게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시켜 일본과의 교류가 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본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81년 2월 황태자 아키히토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등은 명백하게 ‘석유 특사’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와서도 아시아와 제3세계로의 황실 방문은 자원 확보를 위하거나 경제시장 개척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족이나 왕실이 있는 국가와의 친교로 결혼식(6회)이나 장례식(5회), 대관식(1회) 등에 방문한 사례가 40%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2006년 황태자 가족 3인이 네덜란드로 ‘휴양’한 것을 제외하면, 황태자의 외국 방문에 마사코비를 동반한 적은 없었다.⁴²

황족의 외국 방문은 현지 대사관이나 외무성 담당과에서 궁내청에 요청을 하는 형식을 취한다. 외국 방문의 순서는 천황이 가지 않을 경우 황태자가 대신 가는데, 황태자가 아니면 다른 황족의 순으로 행해진다. 황족의 방문에 맞추어 일본 정부의 자금 원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징 천황제이지만 상대국가에서는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황족에게 경제 원조를 부탁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다.

천황이나 황태자의 외국 방문 수행단의 수석수행원 인선과 직무에 대한 법적 기준은 특별히 없다. 1991년 9월 헤이세이 천황의 동남아시아 순방에는 각의 결정에 의해 발령된 수석 수행원 구라나리 다다시(倉成正) 외상 등 20명의 수행원과 국내와의 연락 등 사무적 작업을 하는 수행원 14인이 동행했다. 상대국 주최의 행사에 동석하는 등 황실외교를 보좌하며 역할을 담당하는 외무성은 ‘내각을 대표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쇼와 천황의 유럽과 미국 방문 수석수행원은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수상이었다. 당시의 직책은 부총리 겸 외무대신으로 그때부터 외상 또는 외상 경험자에서 수석수행원을 기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헤이세이 천황의 방중

42 2013년 4월 30일 네덜란드 국왕 즉위식에 마사코 비를 동반한 황태자 부부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됨(2013년 4월 29일~5월 3일 외유).

에는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부총리 겸 외무대신이 기용되었다.⁴³

그런데 중국 방문을 추진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황의 중국 방문은 중일우호는 물론 새로운 시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성을 띠다면 국제친선을 위장한 황실외교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헤이세이 천황이 중국을 방문하기 3년 전에 있었던 천안문사건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시민들에 대한 유혈 탄압으로서, 서방국가들은 여전히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시대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황실의 방중 문제가 대두된 것이었다. 1991년 중국을 방문한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이 인권존중과 민주화를 요구했을 때 중국 정부는 내정문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⁴ 그 탄압의 현장인 천안문광장에 일본 천황이 서둘러 방문하는 것은 분명 자연스런 수순은 아니었다.

1978년 당시 부총리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이 방일했을 때 중국은 처음으로 천황의 방중을 제의했었다. 국가적 차원의 배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은 과거 역사 청산이라는 입장에서 천황을 초청했지만 일본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일본 천황에 대한 중국의 방중 초청은 일곱 번째에야 비로소 성사되었다. 중국이 일본 천황의 방중에 집착했던 것은 천안문사태 이래 소원해진 대서방 관계를 일신하고 일본을 통해 개혁·개방 강화 정책에 필요한 서방 원조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인 계기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천안문사건 후 빠르게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헤이세이 천황의 방중을 추진시켰다.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언젠가 천황의 방중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우익보수계 인사들조차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황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2년 10월 23일 헤이세이 천황의 중국 방문은 ‘우익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되었다. 천황이

43 『朝日新聞』, 1992년 9월 22일 朝刊.

44 『朝日新聞』, 1992년 1월 11일 朝刊.

〈표 6〉 헤이세이 황실 외국방문 현황(1989~2012)

연도 (헤이세이)	1989 (1)	1990 (2)	1991 (3)	1992 (4)	1993 (5)	1994 (6)	1995 (7)	1996 (8)	1997 (9)	1998 (10)	1999 (11)	2000 (12)
회수			1	1	2	2			1	1		1
천황 / 황후			태국/ 말레이 시아/ 인도네 시아	중국	벨기에 (국왕 장례식)	미국 (국제친 선)			브라 질/아 르헨티 나	영국/ 덴마크		네덜란 드/스 웨덴
황태 자 / 비	벨기에	벨기에	노르웨 이/모 로코/ 영국	스페 인/베 네수엘 라/멕 시코		사우디 아라비 아/오 만/카 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아 랍연방				요르단	
황실	5	6	9	8	9	12	7	7	9	12	16	5

연도 (헤이세이)	2001 (13)	2002 (14)	2003 (15)	2004 (16)	2005 (17)	2006 (18)	2007 (19)	2008 (20)	2009 (21)	2010 (22)	2011 (23)	2012 (24)
회수	2	1	3	1	2	1	2	2	1	1	1	2
천황 / 황후		폴란드 헝가리			사이판 (전후 60년 전사자 위령제)	싱가 포르/ 태국	스웨 덴/영 국/에 스토니 아/라 트비 아/리 투아니 아		캐나다			영국
황태 자 / 비	영국	뉴질 랜드/ 호주		덴마크/ 포르투갈	사우디 아라비 아	멕시코	몽골	브라질		가나/ 케냐	독일	사우디 아라비 아 태국/ 캄보디 아/라 오스
황실	8	10	10	13	13	8	7	5	8	13	12	10

* 황실=천황+황태자+황족의 외국방문

중국 국민에 대해 “다대한 고난을 준 것을 깊은 슬픔”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도되었고, 헤이세이 천황에 대한 국민 접대나 방문국에 대한 사죄 발언 표현의 정도가 쇼와 천황보다 한 걸음 더 진전되었다는 평가도 있다.⁴⁵

5. 황실외교와 내셔널리즘: 우경화시대의 황실외교

1980년대 황족의 외국 방문의 정치적 색채가 짙어지는 가운데, ‘전후 총결산’을 내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에 들어서자 황실외교에 대한 정치적 이용은 더욱 현저해졌다.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고 이듬해 전두환 대통령이 방일한 후 황태자 아키히토의 한국 초청을 제안했다. 1986년 벽두부터 황태자 부부의 방한문제가 일본의 신문지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목적에서 일본 정부가 황태자 부부의 한국 친선 방문의 실현을 향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⁴⁶ 한국은 이미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 시기를 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천황 또는 황태자 초청을 희망했으며 일본 정부는 전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입장이었다.⁴⁷ 황태자의 방한 문제가 외교루트를 타고 표면화되자 중국 방문 문제도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다. 중국 측의 황족 초청은 4~5년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이었지만, 일본 정치권에서 황실외교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동등한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1986년 3월 한일 양국의 외무수장이 황태자 방한을 추진한다고 동시에

45 渡辺治, 「皇室外交」, 291쪽. 1982년 6월에는 자오쯔양(趙紫陽) 수상이, 1983년 11월에는 후야오방(胡耀邦) 공산당 총서기가 쇼와 천황과 회견했다. 헤이세이 시대가 되어 1989년 4월에는 리펑(李鵬) 수상은 헤이세이 천황과 회견 후, 기자회견에서 천황이 “중일양국은 긴 세월을 걸쳐 일찍부터 교류를 했고 관계도 양호했습니다만 근대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에는 유감의 뜻(意)을 포함한다.”라고 했음을 밝혔다. 『朝日新聞』, 1992년 9월 18일 朝刊; 『朝日新聞』, 1992년 10월 6일 朝刊.

46 「皇太子ご夫妻が韓国へ 今年秋を目標に政府が日程検討」, 『朝日新聞』, 1986년 1월 1일 朝刊.

47 「皇太子ご夫妻訪韓要請受け検討中 衆院委で外相答弁」, 『朝日新聞』, 1986년 2월 12일 夕刊.

발표⁴⁸했다. 이는 한국 정부 당국자가 공식 입장을 표명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당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일본 외상은 “이번의 황태자의 방한은 한일 양 국민 간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협력관계를 더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으며, 한국의 이원경 외무부 장관은 “황태자가 내년 중국을 방문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한 시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이 끝난 10월 중으로 예상되었다. 나카소네 수상이 자신의 임기 만료인 10월 30일 이전에 황태자의 친선 방문을 실현시켜 ‘한일 신시대’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7월에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해 나카소네 수상의 임기가 연장되자 미치코 황태자비가 자궁종양 수술을 한 직후이고 한국에서도 황태자의 방한을 반대하는 기운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한 중지를 결정했다.⁴⁹

헤이세이 시대로 접어들면서 1989년 4월에는 천황의 중국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뉴스와 더불어, 방한도 이와 함께 준비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⁵⁰ 일본 신문은 이때에도 천황의 방중보다 방한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했고, 5월에 방일하는 노태우 대통령도 천황의 방한을 초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보도되었다.⁵¹ 황실 외교의 실현으로 식민지기의 과거를 청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할 것이다. 쇼와 천황의 상중 기간이 끝나는 1990년 1월 이후, 헤이세이 천황의 즉위식이 끝나는 대로 일본 정부도 새로운 천황 하에서 ‘헤이세이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이 적극적으로 천황의 방한을 추진한 것은 거대 시장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 구축 작업이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한 계획이 어디서 어떻게 중지되어버린 것일까.

48 「皇太子ご夫妻訪韓, 10月實現へ詰め 日韓外相, 公式協議へ」, 『朝日新聞』, 1986년 3월 11일 夕刊.

49 高橋紘, 『象徴天皇』, 116쪽.

50 「天皇訪中, 早期實現へ 訪韓と共に準備 政府方針」, 『朝日新聞』, 1989년 4월 11일 夕刊; 「過去の歴史を踏まえ新時代への決意表明 天皇陛下」, 『朝日新聞』, 1989년 4월 12일 朝刊 등.

51 「天皇訪中の準備急ぐ 實現, 「即位の礼」後 政府方針」, 『朝日新聞』, 1989년 4월 14일 朝刊.

유럽공동시장 출현 등 지역주의의 등장으로 일본은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위치를 다지자면 한중 양국과의 협조가 절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일본은 천황의 방한과 방중 기회를 수 년 전부터 검토해 왔다. 일본은 헤이세이 천황의 방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원했고, 때문에 일본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천황의 방한 초청을 기대했다. 한일 양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듬해쯤 이뤄질 헤이세이 천황의 방한을 계기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일교포 3세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1990년 5월 2일 당시 일본 측은 재일교포 지위 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제시한 9개 항의 요구 중세 가지를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교포 3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한다. 둘째, 외국인 등록증으로 재입국 허가를 대신한다. 셋째, 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은 한국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표면적인 의제로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대중문화 개방을 강력하게 요청할 태세였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천황의 사과와 천황의 방한 초청 문제를 연계하려는 한국의 방침에 일본은 크게 당황했다.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 때 쇼와 천황은 일제의 한반도지배 등 불행한 과거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었다.⁵² 1990년 헤이세이 천황의 사과 표명은 1984년보다 구체적이고 사과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헌법에서의 상징천황 규정 등을 이유로 내세워 천황의 사죄 불가를 주장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의 ‘사죄 문제’로 한·일 양국 정부가 들끓고 있을 당시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 세지마 류조(瀬島龍三)가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막후 접촉을 했다.⁵³ 그 뒤 양국 정부는 조용해졌고 ‘통석의 염을

52 「今世紀の一時期において兩國の間に不幸な過去が存在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再び繰り返され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53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1911년 12월 9일~2007년 9월 4일)는 대일본제국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44기,

금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사과 글귀가 나왔다.⁵⁴ 노태우 대통령은 방일 당시 천황 초청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정식 통보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일 양국 간 현안들은 훨씬 많아지면서 한일관계는 고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1992년 1월 '아시아 중시 외교'를 내세워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수상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봉착해 귀국하자, 일본 우익언론에서 '사과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론이 제기되었다.⁵⁵ 『문예춘추』 1992년 3월호는 '사죄할수록 나빠지는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대한 비판⁵⁶을 실었으며, 일본 우익단체도 반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⁵⁷ 그 후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과 천황 방한 초청이 다시 논의되었다. 김 대통령은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와 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아태시대의 개막을 맞아 국제화를 추구'할 것이며, 일본 천황의 사죄 발언으로 과거사라는 정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상 완전히 매듭지었다는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사죄 발언은 원론 수준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수위에 연연치 않는다'는 입장이

육군대학교 제51기, 대본영 작전참모 역임, 최종계급은 육군중좌, 전후는 이토추상사 회장이다. 세지마의 방한을 주선한 사람은 한일 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으로 1983년 안보경협, 1984년 교과서 파동, 1987년 '마유미사건' 그리고 '천황 사죄 문제' 등의 굵직한 현안에 개입해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박 최고위원 등의 이 같은 접근 역시 1965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속된 '대일 예측화'라는 구조적인 모순을 뛰어넘기보다는 그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12·12 직후에도 역시 세지마를 포함해 나카소네, 가네마루 신(金丸信) 등 거물 정객들이 비공식적으로 방한, 신군부와의 우호 관계 증진 가능성을 타진했다(『한겨레』, 1990. 8. 15).

54 동아일보가 5월 26일 전화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약 70%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동아일보』, 1990. 6. 10).

55 『국민일보』, 1992. 4. 9.

56 「謝罪」するほど悪くなる日韓關係一貫りなき宮澤訪韓を叱る, 『文藝春秋』, 1992년 3월, 134~142쪽. 한국학 학자 다나카 아키라(田中明, 拓殖大學) 교수와 사토 가쓰미(佐藤勝巳) 월간 『현대코리아』 주간에 대담을 실어 군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사토 가쓰미는 『문예춘추』의 자매지 『제군』(諸君) 3월호에도 기고문을 통해 비슷한 비판을 가했다. 내용은 미야자와 총리 방한 시 한국 대중은 천황의 벗집 인형을 태웠고 일본대사관에 달걀을 던졌다, 대사관은 일본의 얼굴이고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다, 진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것처럼 예의를 잃은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글이었다.

57 요코하마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일본 우익단체인 '애국당' 소속 청년 두 명의 가두차량 난입사건을 시작으로 우익단체 반한 활동이 본격화된다. 그들은 MBC의 '일왕' 암살미수 장면 방영, 1월 미야자와 수상의 방한 때 서울에서 일어난 천황 벗집인형 화형식,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이 자기영토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지배 하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주변에서의 한국어선 조업에 대해 사과, 특히 독도의 한국경비대 철수까지 요구했다(『국민일보』, 1992. 4. 9).

었다. 일본에서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고까지 평가했다.⁵⁸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 문제를 비롯해 교과서 파동, 침략전쟁 부정 발언 등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1995년 11월 또다시 일본 천황의 방한 추진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종전 50주년과 한일수교 30주년을 맞아 상징적인 차원에서 아키히토 천황의 방한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이 같은 의사를 한국 측에 전해 왔다’⁵⁹는 것이었다. 또한 1995년 8월 15일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一) 총리가 과거사를 사죄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결국 천황 방한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도 사실상 계승되고 있지 않다. 또한 1997년 3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는 1993년 관방장관 당시의 담화에서 군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⁶⁰ 또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과거 청산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인 만큼 양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인이 납득하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⁶¹

당시 방일한 김종필 총리는 “일본 국왕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 등 주변국을 모두 방문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2000년쯤이 되지 않겠느냐 …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치인들이 망언을 자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⁶²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전에 양국 원수의 상호방문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해 일본 천황의 방한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고 실제 2000년 방한 추진을 표명했다.⁶³ 일본 방문 후 귀국한 김 대통령은 ‘일본 지도층의 망언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 방문 최대 성과로 과거사의 일단락과 IMF

58 일본은 사죄 수준에 대해 지침을 원했지만 한국 정부가 ‘사죄는 일본의 일’이라는 입장을 정리하는 바람에 일본으로서 크게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다원협력시대 열었다/김 대통령 일본 방문 결산」, 『세계일보』, 1994. 3. 27.

59 「일왕 11월 방한 추진/“일 고위관리 밝혀”」, 『동아일보』, 1995. 2. 27.

60 『産経新聞』, 1997년 3월 9일.

61 『매일경제』, 1998. 2. 28; 『동아일보』, 1998. 2. 27.

62 「김 총리 ‘AMF제안’ 논란 예고/美 주도 IMF 처방과 배치 주목」, 『경향신문』, 1998. 11. 30.

63 「日王 2000년 訪韓 추진/교도통신 “金 총리가 의사 표명”」 『경향신문』, 1998. 11. 19.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80%가 ‘일왕’방한에 찬성했다. 「국민 과반수 「天皇」 호칭 “반대”/청와대 설문조사」, 『세계일보』, 1998. 10. 17.

후의 실질적 경제협력 합의를 꼽았다.⁶⁴ 그리고 ‘한일역사공동위원회’도 가동되었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21세기에 들어서도 한일 양국 간 현안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갔다. 일본의 우경화가 본격적인 궤도를 타면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 발족한 ‘한일문화교류회의’도 2001년 8월 무기한 연기되었다.⁶⁵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전에 없이 대립했다. 2003년 6월 6일 방일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방일 결과가 좋고 한일 양국 간 우호적 관계가 지속되면 적당한 시기에 아키히토 일왕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는 보도⁶⁶와, 영빈관에서 천황 내외와 작별인사를 받았을 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며 일왕에 대한 초청의사를 밝혔다”는 보도⁶⁷는 있었지만 일본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2009년 9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한일병합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에 천황의 방한을 희망한다면서, “한일관계는 과거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천황 방한은 “‘양국 간의 거리감을 완전히 없애는 최후 대책의 하나’이며 “양국 간 거리감에 중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에 대해 궁내청 장관 하케다 신고(羽田信吾)는 “요청은 보도에서 들었는데 우선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검토해 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궁내청 독자의 견해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순수한 국제친선을 위해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론으로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천황의 외국 방문은 “국제 간 현안사항이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

64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도 정부 여당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어긋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나 그 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세계일보』, 1998. 10. 12).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죄 수준 평가’에는 「매우 나아졌다」와 「나아진 편」이라는 응답이 65%로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다(『세계일보』, 1998. 10. 17).

65 朴順愛外 編著, 『日本大衆文化と日韓關係』, 三元社, 2002, 9쪽.

66 『국민일보』, 2003. 6. 5.

67 『SBS』, 2003. 6. 9.

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⁶⁸ 천황의 중국 방문의 예에서 보더라도 일본 측의 황실외교의 이용 셈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 측의 명분은 일찍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황실은 정치집단 외의 것”이라⁶⁹고 말한 문구를 빌어 와 형편에 따라 퍼즐 게임을 하는 것과도 같다.

2012년 8월 10일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일왕이 방한하려면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한일 대립이 본격화⁷⁰한 시기인 9월, 일본 여성주간지 『여성자신』(女性自身)이 천황이 “언젠가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해 관심을 집중시켰다.⁷¹ 외교 현안에 관한 정기적인 설명을 듣기 위한 8월 4일의 접견 자리에서 쓰루오카 고지 외무성 종합외교국장에게 이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확인을 거부했고 우리 외교통상부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발언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왜 이런 발언과 보도가 나오는 것인가다. 헤이세이 천황은 2001년에도 간무 천황(桓武天皇)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고 발언했다. 2005년 사이판

68 2009년 9월 24일 「宮内廳 羽毛田信吾長官 定例記者會見」(17:30 【共同通信】).

69 福澤諭吉, 『帝室論』, 1882年.

70 “정부의 독도 외교가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업체로 꼽히는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 등에 서비스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와 병기하기로 했다고 최근 우리 정부에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도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하고 명칭도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모바일 지도에서 독도 단독 표기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지난 8월 유엔 지명회의를 앞두고 일본해와 독도를 병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몇몇 국가들도 일본해 단독 표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이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인터넷, 모바일 기업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 가시화된 것이다”(『서울신문』, 2012. 11. 2).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본 관광객의 방한이 급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촉발된 한일 대립이 본격화한 시기와 일치한다. 지난해 봄만 해도 매달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신장률을 보이더니 9월 들어 3.8% 감소했고, 10월부터는 매달 20% 이상씩 급감하는 추세다”(『매일경제』, 2013. 2. 12).

“일본 각의는 2013년 4월 5일 오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3 외교청서』 발간을 심의, 의결했다. 일본은 또 외교청서에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실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문화일보』, 2013. 4. 5, 6면).

71 「天皇に謝罪要求の衝撃余波! 傷心! 踏みにじられた悲願の訪韓への“ご盡力”」, 『女性自身』 9/4号 (2012년 8월 21일 발매).

방문 때는 한국 평화기념탑에 헌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천황의 방한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⁷² <표 1>에서도 확인된 사항이지만 천황의 해외 방문은 ‘공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최종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내각이 진다고 되어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기관으로서의 행위’인 국사 행위이기 때문에 각의의 조인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언급한 주된 논점을 정리하면 첫째로 황실외교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한 황실외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 황실외교는 1960년대에는 일본의 대미 안보외교를 대신하기도 했으며, 1980년대에는 제3세계와 자원외교의 첨병 역할을 하기도 했고, 1990년대에는 대중 경제외교를 담당했다. 황실외교는 일본 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되어 왔다.

둘째로 중요한 논점은 상징천황제 하에서 황실외교의 독립성 여부다. 황실외교에는 외국대사와 공사의 접수, 외국 요인과 회견, 국민의 환영 행사나 공중 만찬회, 외국 공식 방문 등이 있다. 외국대사와 공사의 접수는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한 국사 행위이며 그 외는 공적 행위로 규정되어 내각이 책임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황실외교라 하더라도 내각의 결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의사나 의도가 관철되는 행위이며 황실의 ‘외국교제’로 표현되는 독립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국제화 시대의 황실외교가 가지는 의미다. 특히 국민 접우의 경우, 1990년대에 황실외교가 구미를 중심(80%)으로 이루어졌지만 21세기에는 아시아 중심(60% 이상)으로 이동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글

72 「訪韓 의사 밝힌 일왕, 日 정부 전향적 자세를」, 『국민일보』, 2012. 9. 22, [사설]

로벌화를 전개하는 속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기업이 아시아로 진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결과 황실 외교를 이용한 것이다. 외국 방문의 경우, 헤이세이 천황의 1992년 중국 방문을 제외하면 황태자 히로노미야의 중동 지역 방문이 대표적이며 이는 제3세계로의 자원외교의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황실외교의 정치적 이용에서 나타나는 내셔널리즘의 표출이다. 일본의 상징천황제도 하에서 황실외교가 잉태하고 있는 문제점은 단순히 일본의 국내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외교란 분명히 상대가 존재하는 차원이므로 일본 정치의 성숙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식민지 과거사 처리 문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우경화 경향이 우려된다. 식민지 통치의 최고 책임자는 천황이었고, 한민족은 천황의 이름으로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다대한 희생을 치렀다. 만약 천황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죄가 필요할 것이다.

메이지 천황 역을 맡은 배우는 어진영과 같은 분장을 하고 출연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연기를 한다. 전후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다룬 영화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러한 작품 속에서 쇼와 천황이 조연으로라도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쇼와 천황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공간을 차지할 뿐 연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본영화에서의 독특한 천황 표현은 러시아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 〈태양〉과 비교되어질 때에 더욱 두드러진다. 〈태양〉은 쇼와 천황의 개인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작되었고, 이는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천황을 일반인이 대신하여 표현하는 행위는 터부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함을 이 글은 밝혀냈다.

주제어: 천황, 일본영화, 〈태양〉, 아라시 간주로, 알렉산더 소쿠로프

국제화시대의 황실외교 | 박순애

투고일자: 2013. 5. 22 | 심사완료일자: 2013. 6. 8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글에서는 주로 헤이세이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 황실외교의 양상과 황실외교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고찰했다. 상징천황제에서 황실외교는 헌법이 정한 천황의 국사 행위(國事行為)이며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 외국 대사와 공사의 접수는 헌법이 정한 국사 행위이며 외국 요인과 회견, 국민의 환영 행사나 궁중 만찬회, 외국 공식 방문 등은 공적 행위다. 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지는 활동으로 각의(閣議)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행위다. 원래의 황실외교는 국제친선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외국의 공식 방문은 각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었다. 1960년대의 대미 안보외교를 비롯해 1980년대 제3세계로의 자원외교, 1990년대의 중국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등에 황실외교가 이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30년간 진행되어 온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 문제는 아직도 전후 처리 문제와 함께 현안으로 남아 있다. 황실의 방한 문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황실외교, 헤이세이 천황, 국제화, 상징천황제

영혼의 정치학: 천황제와 신종교의 접점 | 이찬수

투고일자: 2013. 5. 20 | 심사완료일자: 2013. 5. 28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일본에서 신도(神道)는 인간의 위로를 받지 못한 원령(怨靈)을 조상신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제사를 통해 조상신의 가호를 기원함으로써 현실의 풍요를 보장받으려는 민중적 신앙이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메이지 정부(1868~1912)가 신도를 국가적 통치 시스템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천황의 정당성과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둘째, 그 과정에 담긴 종교적 측면이 신종교의 형성 과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메이지 정부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선조에 대한 제사와 연결시키고 제사의 대상을 일본의 신화적 기원인 아마테라스에까지 확대시켜서,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는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그를 통해 천황 중심의 통일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다. 특히 전물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제사함으로써 국민의 호국적 자세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장치를 이 글에서는 “영혼의 정치학”으로 명명했다.

메이지 정부는 불가시적 영혼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조장해, 조상 제사를 통해서만 가족적 질서를

The protagonist was dressed up just like how Meiji emperor appears in his ‘Goshinei’, or the emperor’s portrait, and played the role with very little movement. Although numerous films on World War II have been made in Japan, there are very few in which Showa emperor was played by an actor. Even in those films, his movements were limited and the acting was kept at minimum. The peculiarities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emperor become more comprehensible when they are compared with a 2005 film <The Sun> by a Russian director. <The Sun> so vividly portrayed the private life of Showa emperor that it shocked the Japanese people. This study uncovers that, until recently, playing the role of the emperor has been considered a taboo in Japan, and there exists implicit norms to avoid fictional representations of the emperor.

• **Keywords:** Tennō (Japanese Emperor), Japanese Film, The Sun, Arashi Kanjuro, Aleksandr Sokurov

Imperial Diploma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PARK Soon Ae

This article considers an aspect of Japanese Imperial diplomacy of the Heisei period and the political use of Imperial diplomacy since the 1990s. Under the symbolic emperor system, Imperial diplomacy is considered as state affairs and it is also a public matter under the provision of Japanes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acceptance of foreign ambassadors and ministers is state affairs, while interviews with high foreign officials, welcoming events for state visitors, hosting of Imperial Court banquet, and formal visits to foreign countries are considered public acts. The Cabinet bears responsibility for such public acts and makes political decisions at cabinet meetings, which are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Imperial activities. Originally, the purpose of Imperial diplomacy is to enhance international goodwill; however, Imperial diplomacy, particularly the official visits to foreign countries by the Imperial Family, is highly colored by the political judgment which reflects the interest of each government.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erial diplomacy of the 1960s was used in relevance to the issues surrounding U.S.-Japan Security Treaty; In the 1980s, it was utilized for the acquisi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Third World; And in the 1990s, the Imperial diplomacy became tinged with economic diplomacy reflecting the expansion of the Chinese market. In terms of the political use of Imperial diplomacy, it is possible to draw a conclusion that it was indeed successful. And yet, even though Korea-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 took place more than 30 years ago, the Japanese Emperor’s visit to Korea is still a pending issue, as the postwar handling of the consequences of the aggressive war remains controversial.

• **Keywords:** imperial diplomacy, Heisei Emperor, globalization, the emperor-as-a symbol system

The Politics of Soul: Where Emperor System and Memorial Service of the Deceased Meet | YI Chan Su

Shinto is a Japanese religion that prays for the gods’ blessings in order to guarantee abundance